

'감염병 안전지대 경제 살리는 전북'

민주 도당, 방역 전초기지·경제 살리기 등 총선 공약 발표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지역 10곳 선거구 전석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전북을 감염병 안전지대로 만들겠다는 약속 등 10대 정책과 67개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주·무주·진안·장수 국회의원)과 김성주 예비후보(전주병), 이한기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등 총선 선대위는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1대 총선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예비후보와 관계자들은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1대 총선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 공약으로는 ▲감염병 안전지대, 방역 전초기지 전북 ▲전북 경제는 쉼! 키우고, 일지라는 확! 늘리기 ▲대한민국을 이끄는 전북사람 키우기 ▲미래먹거리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전북 만들기를 담았다.

또 ▲살맛나는 전북도민과 안전한 전북 ▲전북의 정, 따뜻한 경제 만들기 ▲사물발달 국가교통망 건설 ▲새 만개를 미래는 여는 자원으로 ▲동부권을 전북의 미래로 키우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도당 선대위 측은 이번 총선 정책공약 준비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정책공약TF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안호영 위원장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14개 시·군의 전성시대를 열겠다. 전북 성공시대를 열겠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전북도민의 성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전북 성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전북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특별취재반

'도민 행복 전북'... 민생당 도당, 선대위 출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민생당 전북도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했다

전북도당은 23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부강한 전북, 도

민이 행복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선거의 총책임을 맡은 삼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유성엽, 김경민 예비후보를 선임했으며, 공동선대위원장에 김



민생당 전북도당 예비후보와 관계자들은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광수·고상진·조형철·송병주 씨를 임명했다.

선거대책본부장에는 홍성일·박종서·정도진, 중앙상황실장 김만중, 수석 대변인 홍승태, 소상공인지원단장 조형철, 전략본부장 은영표 씨를 각각 선임했다.

도당은 "3당 합당의 의미를 살리고 호혜와 타협을 통해 선입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평가한 후 "더 이상 일당독식 체제와 정치 양극화가 연장되는 안되는 만큼 반드시 다당체제를 만들어 달라"고 도민에 호소했다.

김경민 삼임선대위원장은 "전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지역 예산 확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등의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동안의 차별과 불대응을 상당 부분 시정했다"며 "이는 다당제와 경쟁체제의 힘인 만큼 민생당이 제1 야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동영·조배숙 예비후보 등은 중앙선대위 직을 맡게 돼 전북 선대위에는 명단이 제외됐다. /특별취재반

4·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최형재 "대한방직 부지 상생 융합도시청사로"

무소속 최형재 예비후보(전주을)는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방안으로 '전주·김제·완주 상생융합도시청사'와 '전북 경제의 심장터' 등 전주 광역화 발전전략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예비후보는 23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이같이 밝히고 전주시의 광역화 전략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도 차원의 대응방안으로 첫째, 전주·완주 통합을 넘어서는 전주·김제·완주 상생융합도시 추진과 둘째, 상생융합도시를 기반으로 익산과 군산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어내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주 광역화 전략 속에서 대한방직 개발 방안이 수립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세부안을 제시했다. 전체 개발 부지를 3등분해 1구역은 토지소유자가 복합상업지구로 개발하고, 2구역은 이전 검토 중인 전주시청사는 '전북 경제 심장터'로 조성한다. 3구역은 공원을 조성해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대한방직 부지와 삼천 사이 도로를 터널로 전환해 삼천과 연계하고, 도청 사이 도로를 철거해 도청의 녹지·실외공간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특별취재반



윤준병, 코로나 극복 비상지역위원회 발족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예비후보(정읍·고창)가 제21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지역조직의 통합과 화합형 조직으로 구성하고, 명칭을 '코로나 극복 비상지역위원회'로 우선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이반에 꾸려진 '코로나 극복 비상지역위원회'는 정읍·고창의 지방선거에 참여해 경쟁했던 민주당의 모든 계파와 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형 기구 형태로 구성됐다.

'코로나 극복 비상지역위원회'는 선거대책위원장과 고문단 및 자문위원단, 특보단으로 구성되며 선거대책 실무를 관장하는 선거대책본부는 정읍과 고창을 분리하여 조직해 운영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당초 선대위 구성과 함께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코로나 극복 비상지역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특별취재반



유성엽, 총선 고창지역 주요 공약 발표

민생당 유성엽 예비후보(정읍·고창)는 23일 오후 2시, 고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총선 고창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2배 인상 및 대상 확대 ▲노인기초연금 10만원 인상 ▲지역업체에 대한 코로나 감세(부가세 감면)를 제시하며, 4선 중진 국회의원이 되어 정부의 지원을 적극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전력 첨단 산업 중심지 조성(한국전력연구원 분원 및 전력 관련 기업 유치) ▲농생명·바이오·스타트업 혁신도시화(농생명 혁신 기업 유치 및 지원) 공약을 제시하며, 고창의 일지리와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생활 공약으로는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이행(전봉준 생가 및 무장기포지 정비 등) ▲고창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및 문화체험형 관광 도시화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어촌 뉴딜300 사업 선정 지원 ▲'천원 택시' 확대 운영 및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농어촌 버스 무료 버스 운행 등을 제시했다. /특별취재반



이강래 "다가오는 이번 선거 조용하고 깨끗하게 치를 것"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예비후보(남원·임실·순창)는 23일 "22일 이강래 예비후보가 네거티브 선거 및 금품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자신이 선언한3무(無)선거운동(네거티브 선거, 돈 선거, 조직 선거)에 동참의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국민의 생업과 생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선대위원회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출퇴근 거리인사를 제외한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선거사무실에서 간담회 등 타운홀 미팅 방식의 유세를 통해 정책과 공약을 설명하는 등 유권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선거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품 제공 및 매수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등 부정·불법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기로 하고 '불법 선거감시단'을 공식 출범시킬 방침이다. 이 예비후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정책의 발굴과 제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이용호 "이강래 예비후보 3무(無) 선거운동 환영"

무소속 이용호 예비후보(남원·임실·순창)는 23일 "22일 이강래 예비후보가 네거티브 선거 및 금품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자신이 선언한3무(無)선거운동(네거티브 선거, 돈 선거, 조직 선거)에 동참의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우리 선거사무소는 지난 21일부터 금품 살포 및 식사제공 같은 불법선거를 근절하기 위한 '부정선거 감시팀'을 운영 중"이라며, "코로나19 정국에서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포함한 각종 행사를 과감히 생략해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용호 선거사무소 '부정선거 감시팀'의 불발행위 제보 전화는(063-635-7752)이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선거는 조직을 꾸려 세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묵묵히 시(군)민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위기 극복에 힘쓰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길이라며,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과 공약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



안호영 "인구감소지역 특례 지원대책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가 인구감소지역 특례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간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23일 "전북의 경우 10개 시군의 소멸지수가 0.5 이하로 타나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그동안 정부정책은 저출산 위주의 인구감소 적응에 머무르거나 특별회계제한 지원이 없는 형식적 시책으로 진행돼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안 예비후보는 인구감소지역 특례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력사업을 활성화되도록 단계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우선 지역균형 발전정책에서 누락돼 있는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대폭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n번방 회원 전원 조사해야"... 가해자 엄벌 지시

문 대통령, 靑 국민청원 관련...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더 엄중히 다뤄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이른바 'n번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착취 등 영상을 제작·유포한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처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

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 조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

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운영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한 청원의 경우 228만 여건의 동의를 얻어, 단일 청원으로 종전 최대 인원이 동의했던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 청원(183만1900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뉴시스

민주, 'n번방' 사건 강력 대응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 '21세기 인신매매' 규정... '임기 내 법 통과'

당내 여성의원들, 재발금지 3법 발의... '박사' 신상공개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으로 제작되고 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포악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과 처벌강화책 등을 논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21세기 인신매매'라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개정된 국민청원제도 1호였던 만큼 국제 공조수단은 물론 양행기준 강화에도 응답해야 한다"며 "외국은 중진형도 가능하지만 우리 형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너무나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의될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며 "총선을 치르고 4월말, 5월초에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일이 있어도 이번 임기 중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강력한 처벌"이라며 "공조한 공범들도 모두 단죄돼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기술은 발전하는데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 자문관은 "일베, 소라넷 등에서 유사한 범죄 셀 수 없이 벌어져지만 대체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느냐"며 "비투나 비공개, 양진호 사건이 벌어져 화상실 불기를 여성들이 걱정할 때 어떤 건 누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자문관은 "이제껏 성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일부 피해자나 일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분노해야만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를 신고한 프로젝트 리셋(Project ReSet)의 한 활동가는 "구속수사를 의무화하고 범죄 도구를 몰수해야 한다"며 "경찰이 제3자 고발을 잘 받아주지 않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활동가는 "기존 사이버

성폭력법 증진하고 내부에 여성경찰관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번방 사건 대응을 위한 재발금지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발금지 3법에 ▲성적 촬영물 이용에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 다운 행위 처벌 및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조치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들은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박사'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국민 알권리 보장을 넘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별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로 반인륜적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윤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불법 촬영물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처벌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형법 등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보다 강력한 가장 처벌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